



국정감사

(한국정보사회진흥원, 정보통신연구진흥원,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 2007. 10. 29)

한국정보사회진흥원

1. 소프트웨어 개발은 중소기업이, 대기업은 이름만 빌려주는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
2. 연구개발망 제공 용량의 평균 5%도 이용 못하는 기관,
10개 중 무려 8개

정보통신연구진흥원

1. “응용기술 개발지원금”은 ‘게임업체’ 우선?
2. 해외교수 강의, 수강생 5명 이하 귀족강의가 23.5%

한국정보문화진흥원

1. 부산, 대구, 성남, 제주에 사는 게 잘못?
2. 최근 10년간 보급 중고PC 60%는 현재 사용 어렵다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

1. “IT 수출입 동향 분석 사업”의 복잡한 체계

소프트웨어 개발은 중소기업이, 대기업은 이름만 빌려주는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

- 정보사회진흥원의 ‘실적위주’의 사업관행으로 명드는 소프트웨어 개발 중소기업
 - 정보사회진흥원은 자금과 인력에 부담을 느끼는 중소기업이 저렴하고 쉽게 정보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IT설비와 소프트웨어를 빌려 쓰는 방식(ASP: Application Service Provider)의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이 사업은 주로 기업간 거래를 지원하는 ASP 솔루션 개발과 보급을 중심으로 과제를 발주함으로써,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동시에 소프트웨어를 빌려 쓰는 중소기업의 정보화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전반적인 정보화를 촉진하는데 그 취지가 있음
 - 2001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2006년 55억원, 2007년 55억원의 예산이 집행됐으며, 2008년 45억원의 예산이 책정돼 있음
 - 이 사업의 추진 성과로 ASP 이용 중소기업 수가 2006년 말 73만개 기업에서 2007년 상반기 84만개 기업으로 증가했으며, 정보사회진흥원은 2008년까지 ASP 서비스를 100만개 중소기업으로 확대·보급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음
 - 사업예산은 ‘매칭펀드’ 방식으로 정보사회진흥원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부담하며, 사업 수행계획서 제출시 약정한 성과목표치에 미달할 경우, 미달 비율에 해당하는 지원금액을 환수조치하도록 계약서에 규정함으로써 사업자로서는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무리수를 둘 수 있는 개연성이 높음
 -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사업의 경우, 대기업 소속 직원들은 실제 개발에 참여하지 않으면서도, 서류상으로는 공동으로 참여한 것으로 작성하여 인건비 산정, 지원금 및 향후 솔루션 사용료 배분 등에 있어서 부당한 이득을 취할 수 있음
 - 정보사회진흥원은 솔루션 개발 완료 후, 계획된 성과 달성여부를 현장실사를 통해 검증해야 하지만, 정보사회진흥원이 제출한 자료 및 구두설명을 통해 파악된 바로는 형식적인 서류심사와 대기업의 ‘과금 시스템’에 대한 실사로 현장실사를 대체함으로써, 직접 솔루션을 사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음

① 공동 프로젝트를 총괄하는 대기업 간부는 홍길동?

- 동일한 시기에 다른 중소기업과 공동 프로젝트도 수행, 같은 날짜, 같은 시간에 다른 장소에 출근?

<사례1>

■ (주)LG데이콤과 (주)공영DBM 컨소시엄의 “2006년도 중소기업 정보화사업(웹서비스 및 IT신기술을 활용한 ASP 솔루션 공급기반 확충 부문) 다중거래선 통합관리를 통한 소상공기업용 영업지원시스템*” 과제를 통한 문제점 분석

※ 부동산 중개업 등 고객 응대가 많은 업종에 종사하는 사업자의 고객관리 및 부재중 또는 통화중 전화에 대한 관리, E-mail, SMS를 통한 고객관리 등을 지원하는 솔루션을 제공하여 효율적인 영업 및 고객관리 업무에 활용하는 시스템

○ 사업개요

가. 목적

- 소상공기업에 VoIP기반의 콜센터와 연계된 영업지원시스템과 웹서비스 기술을 적용하여 다중공급사와 연동될 수 있는 파트너 관계시스템을 제공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기업의 업무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서비스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지원
- 사업자 : LG데이콤-공영DBM 컨소시엄
- 사업기간 : 2006. 6. 29 ~ 2006. 11. 28 (5개월간)
- 사업금액

(단위 : 원)

총사업비	정부지원금	사업자부담금
350,000,000	150,000,000	200,000,000

※ 출처: 정보사회진흥원 국정감사 제출자료(2007.10.25)

○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한 컨소시엄의 경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역할과 참여인력을 사업계획서에 명시하여 제출해야 하며, 참여인력별로 기술등급과 업무분장 내용도 제출해야 함

○ (주)LG데이콤과 (주)공영DBM 컨소시엄이 수행한 2006년 과제의 경우, (주)LG데이콤의 이 모 부장이 사업추진의 총괄책임자로, (주)공영DBM의 김 모 대표가 사업화 범위 총괄 및 사업 전략을 결정하는 책임자로 참여했으며, (주)공영DBM의 정모 차장이 개발 책임을, (주)LG데이콤의 김 모 과장이 품질보증의 책임을 맡기로 했음. 그 외 기술지원/개발 분야에서 (주)LG데이콤에서 1명, (주)공영DBM에서 5명이 참여했음

※ 동 컨소시엄이 정보사회진흥원에 제출한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제8조에 따라 (주)LG데이콤은 30%, (주)공영DBM은 70%의 비율로 참여하며, 손익의 배분도 참여비율에 따르기로 약정함(동 협정서 제9조)

- 과제에 참여한 인원의 실제 참여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로서 출석부를 작성하여 사업종료시 정보사회진흥원에 제출해야 하며*, 이를 토대로 정보사회진흥원은 과제수행과정의 실제 투입 인력을 검증함
 - ※ 정보사회진흥원은 출석부 제출이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답변하고 있으나, 출석부 외 별도의 참여여부 확인 문서 또는 제도가 없다는 점도 밝힘. 따라서 별도의 제도를 마련하지 못한 상황에서 출석부는 참여여부 확인이 가능한 유일한 근거자료임
- 그러나 정보사회진흥원이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동 사업의 출석부를 검증한 결과, 출석부 허위작성, 정보사회진흥원의 사후 검증 부실 등의 문제점이 발견됨
- 과제 총괄책임자인 (주)LG데이콤의 이 모 부장은 (주)공영DBM과의 공동과제에 참여하던 시기(2006.6.29~11.28)에 (주)LG데이콤과 (주)아이컴피어 컨소시엄의 “중소 수출임업체를 위한 Global 협업물류 솔루션” 개발 과제에도 참여했음
- 이 모 부장은 (주)LG데이콤-(주)공영DBM 공동과제의 총 출근일수 104일 중 27일을 출근하였으며(출근률 약 26%), (주)LG데이콤-(주)아이컴피어 공동과제의 경우는 총 출근일수 104일 중 29일을 출근함(출근률 약 27.9%). 총괄책임자로서 프로젝트 참여율이 20%인 점을 고려할 때, 이 모 부장의 서류상 출석률은 높은 것으로 볼 수 있음
- 그러나 양 공동과제의 출석부를 대조한 결과, 이 모 부장은 같은 날 같은 시각에 두 곳의 사업장에 출근한 것이 확인됨.(6/29, 7/19, 7/31, 8/31, 9/12, 9/18, 9/25, 9/29, 10/9, 10/16, 10/23, 10/24, 10/30, 11/3, 11/6 등 총 15일)
- 공동과제의 총괄책임자가 ‘홍길동’이 아닌 이상 같은 날 같은 시각에 두 곳의 사업장에 출현하여 두 개의 공동과제를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므로, 동 출석부는 허위로 작성됐을 가능성이 높음
- 또한 동 출석부의 작성상황을 살펴보면, 다른 참여인력의 경우도 실제 출근한 일시를 사실대로 작성한 것이 아니라, 정보사회진흥원에 제출하기 위한 용도로 일시에 작성한 것으로 판단됨
- (주)LG데이콤이 (주)공영DBM과의 공동과제에 실제로 참여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유일한 수단인 출석부가 허위로 작성됐다면 (주)LG데이콤의 참여여부가 불투명하게 되고, 이는 “대기업의 횡포” 즉 “대기업이 이름만 빌려주고 정부 지원금과 사업 수익금을 가져가는 부당한 사업행태”에 대한 향간의 의혹을 뒷받침하는 실례가 될 수 있음

☞ 정보사회진흥원장은 중소기업을 위한 “중소기업 정보화사업”이 대기업의 횡포에 의해 중소기업이 피해를 받게 될 가능성을 파악하고 있는가?

☞ 정보사회진흥원장은 “중소기업 정보화사업”의 서류 조작 및 불성실한 보고 등에 대한 사후 제재조치 등 제도적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가?

② 정보사회진흥원의 ‘실적위주’ 과제 평가방식에 ‘편법’으로 대응하는 과제 수행업체

○ 정보사회진흥원은 “중소기업 정보화사업”의 성과관리를 위해 각 과제를 수행하는 업체들과의 계약체결시 업체들이 약정한 유료 가입자수 확보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약정사항 미이행시 정부출연금을 환수조치 하고 있음

○ 따라서, 정보사회진흥원의 지원금을 받기 위해 과제수행 업체들은 과제에 따른 ASP 솔루션 개발과 별도로 ASP 솔루션 보급과 목표 유료 가입자수를 반드시 확보해야 함

○ 정보사회진흥원에서 전체 “중소기업 정보화사업”의 목표를 2008년까지 100만개 중소기업들이 ASP, 즉 빌려 쓰는 소프트웨어 가입자로 만드는 것으로 설정한 것은 중소기업들에게 필요한 정보화 도구(솔루션)를 개발하고 널리 보급하기 위한 취지를 수량적 정책목표로 제시한 것으로서 일면 타당한 측면이 있음

○ 그러나, 소위 ‘실적주의’적 사업방식, 즉 실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되면, 사업체들에게 무리한 목표가 설정될 수 있고, 목표달성을 위해 편법을 동원하게 됨으로써 정책의 궁극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사례2>

■ (주)LG데이콤과 (주)공영DBM 컨소시엄의 “2005년도 웹서비스 기반의 중소기업용 CRM 솔루션” 과제를 통한 문제점 분석

○ (주)LG데이콤과 (주)공영DBM이 공동으로 참여한 “2005년도 웹서비스 기반의 중소기업용 CRM 솔루션*”(※ 고객관리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은 목표 유료가입자수가 50개이었으며 솔루션 개발 완료(2005.12) 후 정보사회진흥원의 실사 시점(2007.1)까지 증빙한 가입자수 및 실사결과 유효가입자수는 목표치를 초과한 56개 기업이었음(달성률 112%)(※ 출처: 정보사회진흥원 국정감사 제출자료, 2007.10.26)

○ 그러나 정보사회진흥원이 제출한 56개 유료가입 중소기업에 대한 실사자료를 검증한 결과, 실제 과금이 이뤄진 유료가입자 수는 총 40개였으며, 이중 34개는 쌤소나이트코리아(주)의 대리점들이었음

○ 현행법상 백화점에 입주한 유명 브랜드의 대리점도 중소기업에 포함될 수 있으나, 보다 많은 중소기업들에게 유용한 소프트웨어를 보급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편법을 동원한 ‘실적 채우기’라는 의혹을 불식시키기 어려움

※ 전국 백화점에 입주한 쌤소나이트코리아(주)의 대리점이 개별 사업자라는 정보사회진흥원의 주장이 일관성을 가지려면 개별 대리점들이 독자적으로 사용료를 납부해야 하나 쌤소나이트코리아(주)의 경우 본사가 대리점들의 사용료를 일괄 납부하고 있음

○ 또한, 실사시점(2007.1)에 임박하여 “50% 할인 혜택” 이벤트를 통해 13개 업체를 가입시킨 점은 실사를 통과하기 위한 무리한 “출혈 영업”의 행태로 볼 수 있음

☞ “100만 중소기업에 ASP 서비스 보급”이라는 “중소기업 정보화사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과제수행 업체들은 ‘편법’을 동원해서라도 유료 가입자를 확보하려는 유혹에 빠지기 쉬움. 이런 배경에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지원금 환수조치 등 가혹한 처벌이 있기 때문임. 정보사회진흥원장은 이와 같이 지나친 “실적주의”에 따른 폐해를 극복할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람

☞ 정보사회진흥원장은 ASP 소프트웨어 개발 중소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소프트웨어 개발과 영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관련제도를 정비할 용의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람

③ 실사방식의 과감한 개혁

- ‘서류 위주, 서비스 제공자 위주, 대기업 위주’의 실사방식을 ‘현장위주, 서비스 사용자 위주, 중소기업 위주’로 바꿔야

○ “중소기업 정보화사업” 과제의 실사에 대해 정보사회진흥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보사회진흥원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실사팀(2인 1조)을 구성하여 국세청, 한국신용평가정보, 대한상공회의소 자료 등을 통해 중소기업 여부를 확인하고, 청약서, 과금내역서, 납입내역서, 통장사본 등을 통해 유료가입자 보급실적을 확인하고 있음

- 그러나, 실사가 서류위주로 진행됨에 따라 실사의 보다 중요한 의미, 즉 중소기업의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해 개발된 소프트웨어의 활용도나 개발 당시 발견되지 않은 기술적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소프트웨어 품질개선을 도모할 수 있는 가능성을 사장시키고 있음
- 정보사회진흥원은 수십 ~ 수백 개에 달하는 기업체를 모두 현장방문하여 실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서류중심의 실사가 불가피함을 주장하고 있으나, 취약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현장 실사를 실시한다면 ‘서류위주, 서비스 제공자 위주, 대기업 위주’ 실사의 문제점을 보완할 ‘현장위주, 서비스 사용자 위주, 중소기업 위주’의 실사가 될 수 있음
- ☞ “중소기업 정보화사업”의 실사방식이 기존 ‘서류위주, 서비스 제공자 위주, 대기업 위주’에서 탈피하여 ‘현장위주, 서비스 사용자 위주, 중소기업 위주’의 실사방식으로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고 보는데 정보사회진흥원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망 제공 용량의 평균 5%도 이용 못하는 기관,
10개 중 무려 8개**

□ 들어 가 며

- 국내·외 신기술 및 첨단 분야 등의 R&D를 위한 ‘연구망 사업’은 선도성, 비영리 등의 성격으로, 민간사업자가 직접 투자하기를 주저하는 분야로, 정부가 국가전략사업으로 추진 중임.
-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이하 : NIA)은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8조의2에 근거, 광대역통합연구개발망의 구축·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전담기관으로,
- 지난 2002년부터 광대역, 고품질의 연구시험망을 구축하여 → 대학, 연구소, 산업체 등에 연구 개발 및 시험 인프라를 제공하는 『광대역통합연구개발망 구축운영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음.
- NIA는 이 사업을 통해 유비쿼터스 관련 기술의 시험검증과 첨단 응용분야 연구를 지원함으로써 → 연구역량 강화 및 산업 육성을 도모해 → 국가 첨단 IT 분야의 원천기술력을 확보함과 동시에 → 더 나아가 국가기술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함.
- 즉 ▲망을 제공받는 연구시험기관에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연구시험과제 발굴을 지원하는 등 망을 제공받는 기관의 ‘연구역량’을 강화 시키고자 함.
- 이렇게 제공되는 ‘연구개발망’은 인터넷망과 연동되지 않는 폐쇄망 형태로 운영되어, 국내 상용망에서 제공이 불가능한 다양한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용기관에서는 최선의 기술을 NIA가 제공하는 망에 적용할 수 있어 차세대네트워크 기술의 시연장(테스트베드)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임.

□ 문제점 & 질의

1. 연구개발망 제공 용량 대비 평균 5%도 이용 못하는 기관, 10개 중 무려 8개 기관

- NIA가 제공하고 있는 ‘연구개발망’을 ‘이용’하는 ‘이용기관’은 ▲2002년, 36개 기관 → ▲2003년, 46개 기관 → ▲2004년, 60개 기관 → ▲2005년, 74개 기관 → ▲2006년, 83개 기관 ▲2007년 현재에는 71개 기관인 것으로 나타남.

< 표-1 > 광대역통합연구개발망 이용기관 현황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합 계	2007년
이용기관 수	36	46	60	74	83	299	71
평가 대상기관 수	-	-	-	43	35	78	32

(자료출처 : 2007년 정보통신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 NIA는 망 제공 이후, 연구개발망을 이용하는 이용기관의 ▲성과강화 및 ▲이용촉진을 위하여, 연구개발망을 ‘상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기관에 대해서 ‘이용평가제도’를 시행해 →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환류체계’를 도입하여, 이용기관 지원에 반영하고 있음.
- 따라서 ‘이용평가제도’의 평가대상이 되는 기관은 평가가 시작된 ▲2005년에는, 43개 기관 ▲2006년에는, 35개 기관으로 총 78개 기관인 것으로 나타남.
- ▲2005년에 이루어진 첫 ‘이용기관 평가’는, 이용기관이 2004년 1월 ~ 2005년 6월까지 이용한 내역을 바탕으로, 2005년 8월에 평가가 이루어진 것이며 ▲2006년에 이루어진 두 번째 ‘이용기관 평가’는, 이용기관이 2005년 7월 ~ 2006년 10월까지 이용한 내역을 바탕으로, 2006년 11월에 평가가 이루어진 것임.
- 본 위원은 NIA가 연구역량 강화 및 산업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 연구기관에 제공하고 있는 ‘연구개발망의 이용현황’ - 즉, 이용기관별로 제공되는 망의 ‘평균 및 최대 이용률’ - 을 분석해 보았음.

< 표-2 > 이용기관의 광대역통합연구개발망 이용현황 I

구분	이용기관 명	2005년 이용기관 평가결과					2006년 이용기관 평가결과				
		대역폭					대역폭				
		요구	제공	사 용	사용		요구	제공	사 용	사용	
					평균/최대 트래픽 이용률					평균/최대 트래픽 이용률	
in	out				in	out					
1	경북대학교	1G	1G	0	11% / 92%	14% / 93%	1G	1G	0	3% / 93%	5% / 84%
2	성균관대학교	1G	1G	0	3% / 57%	3% / 78%	1G	1G	0	3% / 11%	3% / 15%
3	한국정보통신대학교	1G	1G	0	3% / 49%	2% / 64%	1G	1G	0	2% / 9%	2% / 9%
4	고려대학교	1G	1G	0	2% / 7%	2% / 7%	1G	1G	0	1.2% / 6%	2.4% / 5%
5	부경대학교	1G	1G	0	3% / 20%	3% / 39%	1G	1G	0	1% / 11%	2% / 11%
6	제주대학교	155M	155M	0	6% / 85%	11% / 88%	155M	155M	0	6% / 87%	13% / 87%
7	충남대학교	1G	1G	0	3% / 19%	2% / 20%	1G	1G	0	2% / 13%	1% / 9%
8	서울대학교	1G	1G	0	6% / 12%	4% / 12%	1G	1G	0	4.3% / 11%	4% / 15%
9	KIST	1G	1G	0	7% / 17%	4% / 8%	1G	1G	0	2% / 9%	2% / 12%
10	국립암센터	1G	1G	0	0.3% / 8%	0.2% / 7%	1G	1G	0	0.3% / 9%	0.2% / 16%
11	동서대학교	155M	155M	0	1% / 10%	1% / 27%	155M	155M	0	1% / 3%	1% / 5%
12	한양대학교	1G	1G	0	1% / 9%	2% / 10%	1G	1G	0	3% / 7%	3% / 7%
13	분당서울대병원	155M	155M	0	4% / 57%	3% / 59%	155M	155M	0	3.2% / 43%	4% / 47%
14	광주과학기술원	1G	1G	0	2% / 9%	1% / 8%	1G	1G	0	1% / 6%	1.4% / 12%
15	천문연구원	155M	155M	0	0% / 73%	0.1% / 48%	155M	155M	0	1% / 15%	2% / 2%
16	KAIST(대전)	1G	1G	0	14% / 44%	7% / 26%	1G	1G	0	12% / 19%	6% / 16%
17	ETRI	1G	1G	0	0.2% / 3%	0.4% / 5%	1G	1G	0	0.2% / 1%	0.2% / 2%
18	이화여자대학교	155M	155M	0	0.1% / 53%	0.1% / 53%	155M	155M	0	1% / 3%	1% / 1%
19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100M	100M	0	0.1% / 2%	4% / 34%	100M	100M	0		
20	건국대학교	2M	2M	0	5% / 77%	5% / 44%	155M	155M	0	0.1% / 4%	0.1% / 4%
21	경상대학교	155M	155M	0	15% / 53%	8% / 34%	155M	155M	0	15% / 60%	12% / 40%
22	인하대학교	155M	155M	0	0% / 13%	0% / 14%	155M	155M	0	0.1% / 0.2%	0.1% / 1%
23	기상청	1G	1G	0	2% / 10%	1% / 5%	1G	1G	0	1.9% / 6%	1% / 9%
24	전남대학교	155M	155M	0	1% / 4%	9% / 29%	155M	155M	0	0.1% / 6%	155% / 37%
25	부산대학교	1G	1G	0	2% / 38%	3% / 36%	1G	1G	0	1.3% / 8%	2% / 7%
26	농촌진흥청	155M	155M	0	2% / 17%	4% / 43%	155M	155M	0	5% / 8%	6% / 25%
27	한국의국어대학교	155M	155M	0	6% / 45%	4% / 40%	155M	155M	0	0.1% / 3%	4% / 26%
28	부산교육정보원	155M	155M	0	1% / 22%	1% / 63%	1G	1G	0	1% / 5%	2% / 7%
29	연세대학교	1G	1G	0	2% / 8%	2% / 8%	1G	1G	0	2.5% / 10%	3.3% / 17%
30	KAIST(서울)	1G	1G	0	1% / 9%	1% / 5%	1G	1G	0	1% / 19%	1% / 54%
31	경희대학교	1G	1G	0	2% / 8%	2% / 6%	1G	1G	0	2% / 10%	3% / 10%
32	서울여자대학교	155M	155M	0	0% / 63%	0% / 53%	155M	155M	0		
33	연세의료원	155M	155M	0	0% / 1%	0% / 5%	155M	155M	0		
34	KISA	155M	155M	0	0% / 1%	0.1% / 5%	155M	155M	0	0.1% / 2%	0.1% / 7%
35	국립보건원	155M	155M	0	0% / 1%	0% / 1%	155M	155M	0	3% / 17%	5% / 49%
36	삼성중합기술원	155M	155M	0	0.1% / 1%	0% / 2%	155M	155M	0		
37	계명대학교	155M	155M	0	9% / 59%	5% / 28%	155M	155M	0		
38	TTA	1G	1G	0	0 / 0	0 / 0	1G	1G	0	0% / 0.01%	0% / 0.02%
39	한국과학재단	155M	155M	0	0.1% / 1%	0.1% / 12%	155M	155M	0		
40	이대목동병원	155M	155M	0	0.1% / 37%	0.2% / 52%	155M	155M	0		
41	동아대학교	155M	155M	0	8% / 62%	8% / 45%	155M	155M	0		
42	강원대학교	155M	155M	0	11% / 54%	11% / 35%	155M	155M	0		
43	성신여자대학교	155M	155M	0	0% / 0%	2% / 15%	155M	155M	0		

* 2006년 이용기관 평가결과에서 공란은 NIA의 해지 혹은 기관별로 다른 망으로 연동한 것임을 뜻함.

(자료출처 : 2007년 정보통신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 NIA로부터 ▲2005년의 경우, 연구개발망을 제공받아 이용하고 있는 기관(74개 기관) 중 평가 대상기관(43개 기관)의 ‘평균 이용률’이, 타 기관으로부터 들어오는(in) 데이터양에 있어서는 ▲망 제공 용량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 기관이 16.3%(7개 기관) ▲0.1% ~ 0.9% 사용하는 기관이 역시 16.5%(7개 기관)인 것으로 나타남.
- 즉, NIA가 망을 제공해도 → 타 기관으로부터 들어오는(in) 데이터양이 ‘평균적으로 제공되는 망의 5%도 사용 못하는 기관’이 ‘이용평가 대상기관’의 **74.5%**(32개 기관)인 것으로 나타남.
- NIA로부터 ▲2006년의 경우, 연구개발망을 제공받아 이용하고 있는 기관(83개 기관) 중 이용평가 대상기관(35개 기관)의 ‘평균 이용률’이 대부분의 이용기관에서, 타 기관으로부터 들어오는(in) 데이터양에 있어서는 ▲망 제공 용량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 기관이 5.7%(2개 기관) ▲0.1% ~ 0.9% 사용하는 기관이 17.1%(6개 기관)인 것으로 나타남.
- 즉, NIA가 망을 제공해도 → 타 기관으로부터 들어오는(in) 데이터양이 ‘평균적으로 제공되는 망의 5%도 사용 못하는 기관’이, ‘이용평가 대상기관’의 **85.7%**(30개 기관)인 것으로 나타남.

〈 표-3 〉 이용기관의 광대역통합연구개발망 이용현황 II

구 분	2005년 이용평가		2006년 이용평가		합 계	
평가 대상기관 수	43개 기관		35개 기관		78개 기관	
제공망 대비 타 기관으로부터 들어오는(in) 데이터 용량의 평균 이용률						
이용 거의 없음 : 0%	7개 (16.3%)	32개 (74.5%)	2개 (5.7%)	30개 (85.7%)	9개 (11.5%)	62개 (79.5%)
0.1% ~ 0.9%	7개 (16.3%)		6개 (17.1%)		13개 (16.7%)	
1% ~ 4.9%	18개 (41.8%)		22개 (62.9%)		40개 (51.3%)	
5% 이상	11개 기관 (25.6%)		5개 기관 (14.3%)		16개 기관 (20.5%)	
제공망 대비 타 기관으로 나가는(out) 데이터 용량의 평균 이용률						
이용 거의 없음 : 0%	5개 (11.6%)	33개 (76.7%)	2개 (5.7%)	28개 (80%)	7개 (9%)	61개 (78.2%)
0.1% ~ 0.9%	7개 (16.3%)		7개 (20%)		14개 (18%)	
1% ~ 4.9%	21개 (48.8%)		19개 (54.3%)		40개 (51.2%)	
5% 이상	10개 기관 (23.3%)		7개 기관 (20%)		17개 기관 (21.8%)	

* ‘이용 거의 없음 : 0%’는 소숫점 이하 반올림해서 0%로 표시되는 것이지, 기관의 이용이 전혀 없다는 의미는 아님을 밝혀둠.

(자료출처 : 2007년 정보통신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 아울러 NIA로부터 ▲2005년의 경우, 연구개발망을 제공받아 이용하고 있는 기관(74개 기관) 중 이용평가 대상기관(43개 기관)의 ‘평균 이용률’이 이용기관에서, 타 기관으로 나가는(out) 데이터양에 있어서는 ▲망 제공 용량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 기관이 11.6%(5개 기관) ▲0.1% ~ 0.9% 사용하는 기관이 16.3%(7개 기관)인 것으로 나타남.
- 즉, NIA가 망을 제공해도 → 타 기관으로 나가는(out) 데이터양이 ‘평균적으로 제공되는 망의 5%도 사용 못하는 기관’이, ‘이용평가 대상기관’의 **76.7%**(33개 기관)인 것으로 나타남.
- NIA로부터 ▲2006년의 경우, 연구개발망을 제공받아 이용하고 있는 기관(83개 기관) 중 이용평가 대상기관(35개 기관)의 ‘평균 이용률’이, 타 기관으로 나가는(out) 데이터양에 있어서는 ▲망 제공 용량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 기관이 5.7%(2개 기관) ▲0.1% ~ 0.9% 사용하는 기관이 20%(7개 기관)인 것으로 나타남.
- 즉, NIA가 망을 제공해도 → 타 기관으로 나가는(out) 데이터양이 ‘평균적으로 제공되는 망의 5%도 사용 못하는 기관’이, ‘이용평가 대상기관’의 **80%**(28개 기관)인 것으로 나타남.
- 본 위원회는 BcN 및 유비쿼터스 관련 기술의 시험검증과 첨단 응용분야 연구를 지원함으로써 연구역량 강화 및 산업 육성을 도모해, 국가 첨단 IT 분야의 원천기술력을 확보함과 동시에 더 나아가 국가기술경쟁력을 확보하고자 제공되는 ‘연구개발망’이,
- 연구기관의 데이터를 타 기관으로부터 받을 때(in) 그리고 타 기관으로 보낼 때(out), ‘제공되는 망’의 5%도 안 되게 이용하기 기관이 10개 기관 중 무려 8개 기관이 해당(< 표-3 >에서 굵은 선 참고, ‘79.5%’ ‘78.2%’) 되는 것으로 나타남, 원장은 이러한 이용률이 적정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위원회는 물론 ‘< 표-2 > 이용기관의 광대역통합연구개발망 이용현황 I’에서도 명시한 바와 같이, 이용기관이 데이터를 주고(out) 받을 때(in)의 ‘최대 이용률’도 고려해 그 이용기관이 연구개발망을 적정하게 이용했는지 판단해야 된다고 여겨짐.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균 이용률이 이 정도의 수치로 나온 것은 분명 ‘이용률’이 ‘저조’하다고 밖에는 말할 수 없을 것임.

2. 이용 잘 했다고 'A' 등급을 맞은 기관, 이용률은 2% 대로 극히 저조

- NIA에서는 망 제공 이후, 연구개발망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이용기관의 ▲성과강화 및 ▲이용촉진을 위하여, 연구개발망을 상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기관에 대해서 '이용평가제도'를 시행하고 →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환류체계'를 도입하여, 이용기관 지원에 반영하고 있음을 앞서 말씀드린바 있음.
- NIA는 '이용평가제도'의 평가대상이 되는 기관에 대해, 평가에 따라 A, B, C, D, F의 5개 등급으로 등급을 매기고, 'D'와 'F'에 해당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다음해에 연구개발망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회선을 해지 즉, 평가결과를 '환류'하고 있음.

< 표-4 > 이용기관의 광대역통합연구개발망 이용평가 결과 현황

등 급	2005년 이용평가 결과	2006년 이용평가 결과	합 계
평가 대상기관 수	43개 기관	35개 기관	78개 기관
A (90점 이상)	2개 (4.7%)	3개 (8.5%)	5개 (6.4%)
B (80점 이상)	18개 (41.9%)	17개 (48.7%)	35개 (44.9%)
C (70점 이상)	12개 (27.8%)	14개 (40%)	26개 (33.3%)
D (60점 이상)	4개 (9.3%)	1개 (2.8%)	5개 (6.4%)
F (60점 미만)	7개 (16.3%)	-	7개 (9%)

(자료출처 : 2007년 정보통신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 문제는 ▲망 이용률뿐만 아니라 ▲연구실적 및 계획 등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평가'가, 연구개발망을 제공해도 제공 용량의 5%도 이용 못하는 기관이 10개 기관 중 무려 8개 기관이나 되다 보니, 평가 시 망을 '우수하게 이용했다' '잘 이용했다'고 평가 받을 수 있는 '우수기관('A' 등급에 해당됨)'이라 할지라도 망 이용률이 그다지 높지 않다는 것임.
- 그 예로 ▲평가 대상기관 중 평가결과 'A' 등급을 맞은 기관은 2005년에는 총 2개 기관(경북대학교, 성균관대학교)이며 ▲2006년에는 총 3개 기관(경북대학교, 성균관대학교, 한국정보통신대학교)인 것으로 나타남.

- 이들 기관 중 2006년에 이용 우수기관으로 'A' 등급을 받은 '한국정보통신대학교'의 평균 이용률을 보면(' < 표-2 > 이용기관의 광대역통합연구개발망 이용현황 I '의 굵은 선 참고), 데이터를 타 기관으로 보낼 때(out)에는 제공망의 평균 2%(2005년, 2006년)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데이터를 타 기관으로부터 받을 때(in)는 제공망의 평균 2%(2006년)와 평균 3%(2005년)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나
- 평가 시 이용을 잘했다고 'A'를 맞은 기관이나, 이용을 잘 못했다고 'D'나 'F'를 맞은 기관이나, 이용률을 비교하는 것은, 이용률이 워낙 낮아 의미가 없게 되어 버린바, 원장은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람.

3. 많이 이용해도 한 자릿수 이용하는 기관이 약 30%

- 이용활성화 방안 마련이 시급

- 본 위원은 NIA가 ▲관련 홈페이지도 보완하고 ▲사업 및 연구성과 책자 등을 제작해 홍보 활동도 강화하고 ▲발전위원회, 이용자협의회, 실무협의회 등의 운영을 통해 광대역통합연구개발망 이용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계신 점을 잘 알고 있음.
- 그러나 광대역, 고품질의 연구시험망을 제공해도, 망을 제공받는 대학, 연구소, 산업체가 이를 제대로 이용하지 않는다면 NIA가 이 사업을 통해 얻고자 하는 목적은 있으나 마나한 목적일 것으로 여겨지는 바, 이용기관의 연구개발망 이용활성화를 위한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물론 본 위원은 이용기관에 대한 평가 시 '이용기관의 망 이용률'이 절대적인 조건은 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음. 그리고 이용기관별로 연구 내용 및 환경에 따라 이용 빈도 및 이용시간 등의 이용형태가 달라져 이용기관의 적정 이용율을 정량화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음.
- 이와 같은 어려움과 '연구망'은 '상용망'과 달리 신기술에 대한 연구시험특성 때문에 이용기관의 '평균 이용율' 보다는 '최대 이용률'을 중요 지표로 보는 것일 것임.
- 그러나 '이용기관의 최대 이용률'을 살펴보면 '한 자리 수 이용률'이 평가 대상기관의 약 30%에 해당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 각 이용기관의 최대 사용량을 고려하여 수용할 수 있는 용량으로 구축해야 하기 때문에, NIA가 사업자에게 망을 이용한 대가를 지불하는 방식이, 이용기관의 망 이용률과는 상관없이 지불하는 것이라, 이용기관이 제공되는 망을 제대로 이용하지 않는다면 고스란히 사용하지도 않는 망 이용요금을 사업자에게 지불하게 되는 것임.
- 이렇게 NIA가, 망 제공기관인 KT에 망 이용 대가로 지불한 금액이 2003년 ~ 2006년까지 총 4년 동안 약 57억원에 이룸.
- 본 위원은 국민의 혈세로 신기술 개발을 위해 망을 제공하는 만큼 혈세가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됨.

“응용기술 개발지원금” 은 ‘게임업체’ 우선?

- 기보의 “초스피드” 심사로 신청금액 전액을 지원받은 게임개발업체
 -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의 모호한 “응용기술개발지원사업”의 지원금 평가기준
-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은 1993년부터 계속사업으로 “IT분야 연구개발 경쟁력 향상을 위해 IT중소기업에 장기·저리 융자를 지원하여 정보통신산업 및 기술발전의 고도화 추진”하고 있음
- 이 사업은 장기저리의 융자 방식으로 IT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과제 선정도 자유공모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또한, 해당기술과 업체에 대한 기술평가기관의 평가를 통한 ‘기술담보’ 또는 ‘일반담보’의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음
- “응용기술개발지원사업”은 예산규모가 방대하고(2006년 예산 1천 8백억 원), 지원대상도 2006년의 경우 206개 기업 225개 과제에 이를 정도로 다양하며, 지액금액도 최소 1억원 ~ 최대 20억원까지 편차가 큼
- 이 사업의 예산규모는 총 1천 8백억 규모이며, 최근 3년간 예산규모 변동추이는 다소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

(단위 : 백만원)

연도	예산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2004	250,000	218,272	-	31,728
2005	195,000	195,000	-	-
2006	180,000	180,000	-	-

- 조사의 편의와 효율성을 위해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이 2006년 지원한 225개의 과제중 과제명이 이해하기 쉬운 과제(“애완로봇 개발”, “통신과 접목된 영어 커뮤니티” 등)와 게임개발 업체의 게임3종(“온라인게임 거상2”, “신암행어사 온라인”, “반칙왕”) 개발과제를 선정하여, ① 지원신청금액과 평가기관의 사정금액, 최종 지원금액의 차이를 비교하고, ② 지원신청부터 심사까지 소요된 시일을 비교하면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음

<“응용기술지원사업” 선정 업체 및 과제 비교>

※ 임의로 선정한 업체와 과제에 대해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이 제출한 지원 대상 업체의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재구성함

(단위: 천원)

순번	기업명	과제명	신청일	신청금액	추천기관	사정금액	추천일	지원금액
1	(주)와이드스페이스	통신과 접목된 영어 커뮤니티	2006.2.14	300,000	구로기술평가센터	223,000	2006.3.16	200,000
2	(주)조이온	온라인게임 거상2	2006.3.16	1,400,000	강남기술평가센터	1,665,000	2006.3.28	1,400,000
3	(주)조이온	신앙행어사 온라인	2006.3.16	1,100,000	강남기술평가센터	1,239,000	2006.3.28	1,100,000
4	(주)조이온	반칙왕	2006.3.16	300,000	강남기술평가센터	335,000	2006.3.28	300,000
5	(주)스카이 스프링앤비텔컴	GSM 휴대폰	2006.	3,000,000	강남기술평가센터	2,500,000	2006.4.13	2,000,000
6	(주)엔코리안	모바일 족보 (M-Genealogy) 서비스 개발	2006.4.3.	1,000,000	강남기술평가센터	450,000	2006.5.18	405,000
7	(주)유경 테크놀로지스	멀티미디어 사업	2006.4.4.	2,000,000	(일반담보) 평가위원회	- (81점)	2006.4.25	1,549,000
8	(주)다사테크	애완로봇개발	2006.5.	2,000,000	인천기술평가센터	1,427,000	2006.6.7	1,284,000
9	(주)굿어스	IT Management Service	2006.5.22	1,610,000	강남기술평가센터	1,173,000	2006.6.22	1,000,000

※ 출처: 정보통신연구진흥원 국정감사 제출자료(2007.9.28)

① 지원신청금액과 평가기관의 사정금액, 최종 지원금액의 차이

○ 위의 표를 살펴보면 “조이온”이라는 게임업체의 “게임3종” 개발 과제에 대한 지원과정에서 다른 6개의 과제와 달리 지원신청금액과 지원금액이 동일한 점을 발견할 수 있음

※ “조이온”은 1999년 12월 24일에 자본금 30억 3천여만 원으로 설립된 게임회사로서 182명의 임직원이 근무하는 게임개발업체임

※ 2003~2005년 “조이온”의 재무실적

(단위: 백만원)

구 분	총 자산	자기자본	매출액	당기순이익	유동비율	총자본 경상이익율
2005	30,786	19,716	13,791	-598	130.07%	-0.43%
2004	20,273	13,359	17,104	450	163.64%	1.44%
2003	17,813	7,915	16,420	1,345	119.31%	7.68%

-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의 “응용기술개발지원사업”에서 지원금이 결정되는 절차는 사업계획서 제출(신청업체) → 평가기관 심사 및 사정(기술신용보증기금 각 지역 기술평가센터) → 평가서 제출 → 지원(정보통신연구진흥원) 단계로 구분할 수 있음
- 이 절차에 따라 위의 표를 보면 “조이온”을 제외한 6개의 신청업체는 금액으로는 최대 7억 1천 6백만 원([주]다사테크) ~ 최소 1억 4천 3백만 원([주]와이드스페이스)까지 지원금이 삭감됐으며, 비율로는 최대 59.5%([주]엔코리안) ~ 최소 22.5%([주]유경테크놀로지스)까지 다양함
- 그러나 “조이온”이 신청한 개발과제는 3개 과제 공히 신청한 금액대로 지원금이 결정됐음
- “조이온”의 6개사의 경우 기보의 지역기술평가센터의 심사과정에서 사정금액이 신청금액에 비해 대부분 삭감된 것에 비해, “조이온”의 “게임3종” 개발 과제는 오히려 사정금액이 신청금액을 상회하는 기현상이 발생함

② 지원신청부터 심사까지의 소요시일

- 지원신청부터 심사까지의 소요시일도 “조이온”과 다른 6개사의 차이가 현격함
 - “조이온”을 제외한 6개사의 경우 짧게는 21일([주]유경테크놀로지스)부터 길게는 45일([주]엔코리안)까지의 시일이 소요됐으며, 평균 약 한달의 시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임
 - “조이온”의 경우 “게임3종”의 개발 계획서를 2006년 3월 16일 기술신용보증기금 강남 기술평가센터에 일괄 제출하고, 기보 강남기술평가센터에서 3월 28일 심사결과와 추천서가 발급되어 신청부터 심사까지 단 12일 밖에 소요되지 않은 “초스피드” 심사를 받았음
- ☞ “응용기술개발사업” 과제 선정과정에서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의 역할은 무엇인가? 기술보증기금이 추천한 업체와 평가금액대로 지원만 하는 곳인가? 우연의 일치로 보일 수 있으나, 위의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다른 게임개발업체의 게임개발과제에 대해서도 특혜가 있는가? 특혜가 있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가?

- ☞ 온라인 게임 등 게임개발업체들은 게임 판매와 게임 이용료 등으로 용자금 회수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 때문인가? 그렇다면 돈 되는 사업만을 지원하는 은행이나 투자회사들과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의 차별성은 무엇인가?
- ☞ 정보통신연구진흥원장은 본 위원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2006년 응용기술개발사업” 선정과제 전체를 조사하여 의혹을 규명할 용의가 있는가?
- ☞ 정보통신연구진흥원장은 “응용기술개발사업” 선정절차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어떤 대응조치를 강구하고 있는가?
- ☞ 정보통신연구진흥원장은 “응용기술개발사업”을 보다 투명하고 엄격하게 운영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용의와 계획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교수 강의, 수강생 5명 이하 귀족강의가 23.5%

□ 들어 가 며

-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이하 : IITA)은 정보화촉진기본법 제35조의 2에 근거 ▲정보통신 연구개발 수요조사, 기술예측 및 연구기획 ▲정보통신 연구개발사업 평가·관리 및 개발결과의 산업화 촉진 지원 ▲정보통신분야 기술정책연구, 정보 조사·분석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해 1992년 설립된 기관임.
- IITA는 ▲첨단 기술을 가진 외국 전문가들을 교수로 초빙하여 국내대학과 국제공동연구등을 추진함으로써 → 국내대학의 연구 활성화에 기여하고 ▲외국인 우수 교수들과 국내 대학 학생들이 함께 연구 및 강의에 참여함으로써 → 학생의 연구능력과 국제적 감각을 제고 시키고 ▲국내·외 대학간 결연 및 산학협력프로젝트 수행을 통해 → 연구 및 인력 교류 등의 활성화와 대학의 국제화 및 국제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기 위해,
- 국내 IT 관련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대학이 해외 교수, 해외 산업체·연구소 등의 전문가를 국내 대학으로 초빙해 ‘교수’로 활용할 수 있게 ‘예산’을 지원하는 『해외교수 초빙지원사업』을 2001년부터 진행해 오고 있음.
- 사업은 “IITA, 사업 공고 → 해당 대학, 신청 → IITA, 사전검토(초빙교수 자격요건 충족 및 초빙여건 확보 여부 등) → IITA 평가위원회 평가(해당 대학에서 신청한 교수의 자질 및 활용분야의 중요성, 활용계획의 적정성, 기대효과 등에 대한 평가) → IITA 심의위원회 평가(지원여부 및 지원규모 등 확정) → IITA, 선정 → IITA, 해당 대학에 대한 지원의 절차”로 진행됨.

□ 문제점 & 질의

1. 해외교수 강의, 계획대로 정상적으로 개설된 강의는 단 67.2%

- 최근 3년 간(2004년 ~ 2006년) 『해외교수 초빙지원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은 대학은, 총 52개 학교 ▲이들 대학이 초빙한 해외교수는, 총 178명인 것으로 나타남.

< 표-1 > 해외교수 초빙지원사업 현황 I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합 계
예 산	40억	40억	40억	120억
지원받은 대학 수	18개	16개	18개	52개
초빙된 교수 수 (teaching 교수 + researching 교수)	63명	50명	65명	178명
teaching 교수 수	63명	47명	61명	171명

(자료출처 : 2007년 정보통신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 ‘초빙되는 교수’는 크게 ▲강의중심(teaching) 교수와 ▲연구중심(researching) 교수로 나누어지는데, 본 위원은 이 중 강단에서 직접 학생들에게 강의를 한 ‘teaching 교수’ ‘171명’을 중심으로, 『해외교수 초빙지원사업』의 ‘목적’이 제대로 달성되었는지 살펴보았음.
- 2004년부터 ~ 2006년까지 최근 3년간 해당 대학이, IITA에 해외교수를 초빙해 강의하도록 지원하는 이 사업에 신청할 때 제출한 ‘계획서’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해외교수의 강의 계획 과목 수’는 총 323개 과목인 것으로 나타남.

< 표-2 > 해외교수 초빙지원사업으로 개설된 강의 현황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합 계
대학의 사업 신청 시, ‘해외교수가 강의하게 되는 강의 수(계획)’	104개	87개	132개	323개
‘실제 해외교수가 강의한 강의 수’	131개	89개	142개	362개

(자료출처 : 2007년 정보통신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 그러나 실제, 해외초빙 교수가 강의한 강의 수는 ‘계획(323개)’보다 39개가 많은 362개 인 것으로 나타남. ‘강의한 강의의 수’만을 보면 ‘계획(323개)’ 대비 ‘실적(362개)’이 매우 우수한 것으로 판단 할 수도 있음.
- 그러나 사실 해당 대학이 사업 신청 시, 해외초빙 교수가 강의하기로 되어 있는 강의대로 즉, ‘정상적으로 개설된 강의’는 ‘전체 개설 예정인 강의(323개)’의 67.2%(217개 강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즉, 32.8%에 해당되는 강의(106개 강의)가 계획과 같이 ‘정상적’으로 개설되지 않고 ▲강의명이 변경되거나(42개) ▲계획된 강의가 수강 신청자가 단 한명도 없어 폐강되었거나(8개) ▲계획된 강의가 수강 신청자가 단 한명도 없어 폐강되어, 초빙된 해외교수에게 강의를 맡기기 위해 불가피하게 신규로 강의를 개설했거나(34개) ▲해당 학교가 해외교수를 초빙하기 전 해당 교수와 이미 개설되는 강의에 대해 확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초빙된 이후 계획에도 없었던 강의가 신규로 개설이 되어(61개) 강의한 것으로 나타남.
- 본 위원은 해당 대학이 해당 해외교수와 개설되는 강의에 대해 이미 협의를 마친 상태에서 IITA에 사업을 신청하고, IITA는 이것을 총 3단계의 평가(▲1단계 : 사전검토 → ▲2단계 : 평가위원회 발표평가 → ▲3단계 : 심의위원회 종합심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지원할 대학이 정해지는 것으로 알고 있음.

< 표-3 > 해외교수 초빙지원사업으로 개설된 강의 현황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합 계
대학의 사업 신청 시, ‘해외교수가 강의하게 되는 강의 수’	104개	87개	132개	323개
‘실제 해외교수가 강의한 강의 수’	131개	89개	142개	362개
: 계획과 같이 정상적으로 개설된 강의 수	90개	52개	75개	217개 (67.2%)
: 계획과 달리 강의명이 변경되어 개설된 강의 수	9개	10개	23개	42개
: 계획된 강의가 수강 신청자가 없어 폐강됨	-	8개	-	8개
: 계획된 강의가 수강 신청자가 없어 폐강되어 대신 다른 강의가 신규로 개설됨	5개	15개	14개	34개
: 계획에도 없었던 강의가 신규로 개설됨	27개	4개	30개	61개

(자료출처 : 2007년 정보통신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 즉, 해당 교수와 이미 개설되는 강의에 대해 협의를 마친 상태에서 IITA는 지원이 이루어지고, 해당 교수는 해당 대학에 강의를 하기 위해 국내로 입국 하게 되는 것임.
- 그러나 해당 교수가 막상 국내에 입국해서 보면 국내로 입국하기 전 협의한 내용과는 다르게, 자신이 담당할 강의는 폐강 되어 신규 강의를 개설되거나, 강의명이 변경되어 변경된 강의명에 맞춰 강의의 내용도 변경해야 하거나, 협의 당시에는 없던 강의를 신규로 강의를 맡게 되는 것임.
- 본 위원회는 이렇게 계획과는 다르게 사업이(강의가) 진행되고 있는 현실은 우선 ▲해당 대학이, 해당 해외교수와 충분한 대화나 협의 없이 사업을 주먹구구식으로 신청을 했으며 ▲IITA는, 해당 대학이 사업에 신청 했을 때, 해당 대학이 밝히고 있는 ‘계획’이 ‘실현 가능한 계획’인지 꼼꼼히 따져보지 않고 지원결정을 했음을 반증하는 결과라 판단되는바, 원장은 이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주시기 바람.

2. 해외교수 강의, ‘계획’ 대비 ‘실 수강생’ 는 고작 71.6%

- 이러나 보니 해당 대학이, IITA에 해외교수를 초빙해 강의하도록 하는 이 사업에 신청할 때 제출한 ‘계획서’에 따르면 ‘해외교수가 담당하는 강의의 예상 수강생’은 총 7,614명이지만, 실제로는 71.6%(5,454명)만이 해외교수가 강의하는 강의를 수강 한 것으로 나타남.

< 표-4 > 해외교수 초빙지원사업으로 개설된 강의의 수강생 현황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합 계
대학의 사업 신청 시, ‘해외교수가 담당하게 되는 강의의 예상 수강생 수’	2,238명	2,096명	3,280명	7,614명
‘실제 해외교수가 감당하고 있는 강의의 수강생 수’	1,826명 (81.6%)	1,116명 (53.2%)	2,512명 (76.6%)	5,454명 (71.6%)

(자료출처 : 2007년 정보통신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 더욱 문제는 계획에도 없이 신규로 개설된 총 61개 과목의 ‘예상 수강생 수’를 더한다면, 계획 대비 실제로 해외교수가 강의한 강의를 수강한 학생의 %는 더욱 내려갈 것이 명백한 바,
- 원장은 왜 ‘계획’ 대비 ‘실제 수강생 수’가 이렇게 저조하게 나온 것인지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람.

3. 해외교수 강의 수강생 수, 계획대로 된 강의를 고작 12%

- 본 위원은 앞서 이 사업에 해당 대학이 신청할 때 제출한 ‘계획서’에 따르면 ‘해외교수가 담당하는 강의의 예상 수강생’은 총 7,614명이지만, 실제로는 71.6%(5,454명)만이 해외교수가 강의하는 강의를 수강한 것으로 나타난 현실에 대해 말씀 드렸음.
- 본 의원은 이 사업의 소기의 목적 - 외국 교수와 국내 학생의 협력 등 - 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해당 대학’에서는 해외교수가 영어로 강의하는 내용을 충분히 소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학생의 수를 좀 더 면밀하게 고려해 강의별로 수강생 수를 예상하고 → 이를 반영해 → IITA에 사업 신청 시 제출해야 하고,
- ‘IITA’는 해당 대학이 제출한 서류에 나타난 내용이 현재 해당 대학이 처한 현실(조건)과 맞는 것인지 즉, 해당 대학이 이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면밀하게 검토해 선정, 지원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표-5 > 해외교수 초빙지원사업으로 개설된 강의 현황

	2004년	2005년	2006년	합 계
계획과 같이 정상적으로 개설된 강의 수	90개	52개	75개	217개
: ‘계획’과 ‘실제 수강생 수’가 오차 없는 강의 수	19개	1개	6개	26개 (12%)
: ‘계획’ 대비 ‘실제 수강생 수’가 더 많은(+) 강의 수	15개 (+1 ~ +4)	8개 (+1 ~ +50)	13개 (+1 ~ +58)	36개 (16.6%) (+1 ~ +58)
: ‘계획’ 대비 ‘실제 수강생 수’가 더 적은(-) 강의 수	56개 (-1 ~ -36)	43개 (-1 ~ -42)	56개 (-1 ~ -52)	155개 (71.4%) (-1 ~ -52)

(자료출처 : 2007년 정보통신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 그러나 ‘계획과 같이 정상적으로 개설된 강의’ 총 217개 강의를 대상으로 ‘해당 대학이 IITA에 이 사업을 신청할 때 예상한 수강생 수’와 ‘실제 해외교수가 강의한 과목을 수강한 수강생 수’를 비교한 결과, ‘계획’과 ‘실제 수강생 수’가 ‘오차 없이 일치하는 강의’가 ‘정상적으로 개설된 강의’의 고작 12%(26개 강의)만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즉, 계획과 같이 정상적으로 강의를 개설되어 해외교수가 강의를 진행했다 하더라도, 강의를 수강한 수강생 수가, 계획과 다른 강의를 무려 88%에 이른다는 것임. 본 위원은 해당 강의를 개설할 시 그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의 수를 정확히 예상하는 것이 무척 어려운 일임을 잘 알고 있음.
- 그러나 ‘계획’ 대비 ‘실제 수강생 수’ 차이(+, -)가 무려 1명에서 58명까지 차이 나는 것은 해당 대학이 IITA에 이 사업을 신청할 때 얼마나 무성의하게 계획을 작성하고, 그리고 IITA는 해당 대학이 제출한 서류를 얼마나 무성의하게 심사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인바, 원장은 이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람.

4. 해외교수 강의 ‘수강생이 단 한명도 없어 폐강’ 11.6%

- 사업을 신청한 대학도, 이를 심사하는 IITA도 무성의로 일관하다 보니 실제 해외교수가 강의한 362개 강의 중 수강 신청자가 단 한명도 없어 폐강된 강의가(아예 ‘폐강된 강의 : 8개’와 ‘폐강된 이후 신규 강의로 다시 개설된 강의 : 34개’ 모두 포함) 42개 강의(11.6%)에 이른 것으로 나타남.
- 본 위원은 이와 같은 현실은 ‘해외교수가 강의하는 강의에 대한 학생들의 요구(수요)’를 해당 대학과 IITA 모두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원장의 입장과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람.

5. 해외교수 강의, 수강생 5명 이하인 귀족강의가 23.5%(85개 강의)

- 역시 사업을 신청한 대학도, 이를 심사하는 IITA도 무성의로 일관하다 보니 실제 해외교수가 강의한 362개 강의를 ‘수강생 수’에 따라 구분해 본 결과, 수강생 5명 이하 강의가 23.5%(85개 강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심지어는 수강생 5명 이하 강의 중 ‘수강생이 단 1명인 강의’도 ‘4개 강의’나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바, 본 의원은 물론 단 1명의 수강생이라도 해당 강의를 절대적으로 필요로 한다면, 강의를 개설해 배움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도 생각도 되지만,
- 수강생이 3명 ~ 5명 이하인 경우 폐강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때, 그 절대적인 필요성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해 봐야 될 사항으로 여겨지는 바, 이에 대한 원장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표-6 > 해외교수 초빙지원사업으로 개설된 강의의 수강생 현황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합 계	
강의 수	131개 강의	89개 강의	142개 강의	362개 강의	
수 강 생 수	1명 이상 ~ 3명 이하	13개	11개	10개	34개 (9.4%)
	4명 이상 ~ 5명 이하	21개	7개	23개	51개 (14.1%)
	6명 이상 ~ 10명 이하	27개	22개	35개	84개
	11명 이상 ~ 15명 이하	30개	17개	23개	70개
	16명 이상 ~ 20명 이하	15개	9개	10개	34개
	21명 이상 ~ 25명 이하	8개	7개	7개	22개
	26명 이상 ~ 50명 이하	16개	5개	26개	47개
	50명 이상 ~	1개	3개	8개	12개

(자료출처 : 2007년 정보통신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6. 3학점짜리 1개 강의로 월 평균 500만원 이상 받는 고액 해외교수 9.6%

- 앞서 본 위원은 해외교수가 강의한 362개 강의를 수강생 수에 따라 구분해 본 결과, 수강생 5명 이하 강의를 무려 23.5%(85개 강의)를 차지하는 것에 대해 말씀드린바 있음.
- 더욱 문제는, 일부 해외교수의 경우 이렇게 수강생 수가 많지도 않은 강의를 맡고 있는 것도 모자라, 강의의 댓가로 받는 금액(강의료) 또한 상당히 고액인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임.

- ‘3학점’짜리 ‘1개 강의’를 6개월(즉, 1학기) 강의한다고 했을 때 해외교수에게 지급된 월 평균 강의를 보면, 월 500만원 이상을 받는 고액 해외교수가 9.6%(16명)인 것으로 나타난 바, 원장은 이에 대해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표-7 〉 해외교수 초빙지원사업으로 개설된 강의의 강의료 지급 현황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합 계
teaching 교수 수		63명	47명	61명	171명
3학점 짜리 1개 강의로 월 평균 지급된 강의료	50만원 이하	-	-	-	-
	50만원 초과 ~ 100만원 이하	1명	4명	9명	14명
	100만원 초과 ~ 200만원 이하	26명	13명	22명	61명
	200만원 초과 ~ 300만원 이하	12명	13명	22명	47명
	300만원 초과 ~ 400만원 이하	5명	11명	5명	21명
	400만원 초과 ~ 500만원 이하	7명	2명	3명	12명
	500만원 초과 ~ 1,000만원 이하	10명	4명		14명
1,000만원 이상	2명			2명	

(자료출처 : 2007년 정보통신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 더더욱 문제는 ‘teaching 교수’는 1학기에 6학점 즉, 2개 강의를 하는 조건으로 해외에서 초빙된 교수로, 실제로 받는 월 평균 강의료는 표에서 나타난 금액에 ‘×2’를 했을 때의 금액으로, 그 금액은 실로 엄청나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물론 실력이 뛰어난 교수에 대해서는 해당 교수가 국내 교수든 해외 교수든 ‘강의료’로 그 만큼의 대접을 해줘야 된다는 것쯤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야 IITA가 그토록 이 사업의 목적 - ▲첨단 기술을 가진 외국 전문가들을 교수로 초빙하여 국내대학과 국제공동연구 등을 추진함으로써 국내대학의 연구 활성화에 기여 ▲외국인 우수 교수들과 국내 대학 학생들이 함께 연구 및 강의에 참여함으로써 학생의 연구능력과 국제적 감각 제고 ▲국내·외 대학간 결연 및 산학협력프로젝트 수행을 통해 연구 및 인력 교류 등의 활성화와 대학의 국제화 및 국제 경쟁력 제고에 기여 - 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 그러나 우리나라 이공계 교수, 전임강사 등에게 3학점짜리 1개 강의를 맡기고 지급되는 강의료를 고려한다면 그리고 본 위원이 앞서 지적한 것처럼 해외교수 강의가 ▲계획대로 정상적으로 개설된 강의를 단 67.2%이고 ▲계획 대비 실 수강생 수는 고작 71.6%인 점 ▲수강생 수가 계획대로 된 강의를 고작 12%인 점 ▲수강생이 단 한명도 없어 폐강된 강의를 11.6%에 이르는 점 ▲수강생 5명 이하인 귀족강의가 23.5%에 해당되는 점 ▲3학점짜리 1개 강의의 월 평균 강의료가 500만원 이상인 고액 해외교수가 9.6%인 점을 감안한다면, 한해 약 40억원의 예산을 들인 『해외교수 초빙지원사업』이 성공적이라 단언할 수 없을 것인바, 이에 대한 원장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7. 해당 대학의 계획 변동 시, IITA로의 사전후 통보 및 승인 등 보완대책 마련해야

- 사정이 이러한대도 본 위원이 조사한 2004년부터 ~ 2006년까지 최근 3년간 ▲IITA의 자체감사 ▲정통부 감사에서도 미꾸라지 빠지듯 한번도 지적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 본 위원은 현실이 이러하니 해외교수를 초빙하지 말자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음. 요즘과 같이 ‘외국어’ 하나 때문이라도 외국으로 유학을 가는 현실에, 해외교수를 초빙해 국내에서 강의하도록 한다면 ‘외국어’와 ‘전공 과목’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일 것임.
- 위와 같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 사업에 신청하는 해당 대학도, 예산을 지원하는 IITA도 수요조사, 효과분석 등 낭비되는 외화가 없도록 치밀한 계획을 세워야 할 것임.
- 본 위원은 해당 대학이 제출한 계획을 믿고 IITA가 지원하는 예산이니만큼, 해당 대학이 주먹구구식으로 학사운영을 방만하게 운영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의 책임이 분명 IITA에게 있다고 판단됨.
- 본 위원은 예산 지원 후, 해당 대학이 계획의 변동이 예상될시 ▲‘사전(사후)’에 IITA에 ‘통보’를 한다든지 ▲‘사전’에 IITA의 ‘승인’을 받는다면 하는 사안에 따라 기준을 정해 예산 지원을 받는 대학이 더 이상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을 운영하지 않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십사 부탁 말씀을 드림. 이에 대한 원장의 의견과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대구, 성남, 제주에 사는 게 잘못?

- 지자체로 이관키로 한 “저소득층 청소년 정보화 교육 사업”, 부산, 대구, 성남, 제주는 교육장도, 지원계획도 없어
 - 올해 종료된 정보문화진흥원의 “저소득 청소년 정보화 교육”사업을 정보화 교육 소외지역 중심으로 재개해야
- “저소득층 청소년에게 소프트웨어 기술교육을 실시하여 지식정보화 사회에 대한 적응력과 취업능력을 향상시키고 정보격차 해소에 기여”하고자 정보통신부가 1999년부터 시행해 온 “저소득 청소년 정보화교육 사업”이 2006년 종료됨
- ※ 정보문화진흥원은 2006년 사업 수행
- 이 사업은 정보통신부(정보문화원)와 18개 지자체가 매칭펀드 방식으로 전국 19개 교육기관을 통해 교육을 실시했음
- ※ 교육기관 : 정통부 1개소(정보통신교육원), 지자체 18개소(강남, 강북,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전주, 춘천, 성남, 청주, 구미, 진주, 제주, 목포, 여수, 군산, 안산)
- ※ 지자체 교육기관 선정은 정통부에서 동 사업을 희망하는 지역의 신청서를 받아, 현장실사 후 최종 확정함
- 8년간 시행된 사업을 통해, 전국 14개 교육장 12개 과정의 교육을 실시하여 115,752명이 혜택을 받았고, 2002년부터 시작된 온라인을 통한 원격 소프트웨어 교육을 통해 89,309명이 교육과정을 이수했음

< 연도별 저소득층 청소년 소프트웨어 교육 실적 >

(단위 : 명)

구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계
S/W 기술교육	865	8,652	22,208	21,406	20,215	15,069	14,126	13,211	115,752
원격 S/W 기술교육	-	-	-	12,394	14,411	36,833	11,808	13,863	89,309
계	865	8,652	22,208	33,800	34,626	51,902	25,934	27,074	205,061

- 그러나 지자체로 사업이 이관된 이후, 지자체의 예산부족과 관심부족으로 일부 지역의 교육장이 폐쇄되거나 교육이 중단되는 문제가 발생하여 현황을 파악함
- “저소득층 청소년 정보화 교육사업” 예산은 2001년 가장 많은 예산이 편성된 이후점차 축소돼 왔음

< 연도별 예산 집행내역 >

(단위 : 백만원)

사업년도	예산	집행	잔액
1999년	10,000	6,953	3,047
2000년	1,000	785	215
2001년	14,600	10,480	4,120
2002년	7,936	7,185	751
2003년	5,400	5,375	25
2004년	3,922	3,901	21
2005년	3,900	3,851	49
2006년	2,000	1,779	221
합 계	48,758	40,309	8,449

- “인터넷이 보편화되고 전국 지자체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정보화 교육이 활성화됨에 따라, 집합교육은 해당 지자체로 이관하고, 원격교육은 정통부가 통합 운영*하는 것으로 각 지자체와 협의후 사업을 종료”키로 했다고 정통부는 밝히고 있음

※ 온라인 정보화교육(“배움나라” www.estudy.or.kr)은 2001년 9월부터 정보문화진흥원에서 운영중이며 2007년 총 10억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음

- 그러나 정통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7년 9월 현재 “저소득층 청소년 정보화 교육사업”이 이관된 14개의 지자체 중 부산, 대구, 성남, 제주는 교육장이 폐쇄됐거나 공사중이며, 별도의 교육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지자체별 저소득 청소년 정보화교육 추진현황('07년 9월)>

(단위 : 백만원)

번호	지역명	운영기관	지원형태	예산
1	인천	인천정보산업진흥원	인천광역시 지원	160
2	안산	안산청소년수련관	안산시 지원	90
3	청주	청주시 교육장	청주시 지원	50
4	전주	전주게임엑스포 조직위원회	전라북도 지원 ※ '07년 12월부터 교육 예정	150
5	여수	한영대학교	여수시 지원	90
6	춘천	춘천청소년수련관	강원도 지원	200
7	구미	구미시 교육장	구미시 직접운영	160
8	군산	군산시 교육장	군산시 직접운영	80
9	목포	일반주민 정보화교육기관	목포시 지원	일반주민 교육과정과 통합운영
10	진주	일반주민 정보화교육기관	진주시 지원	일반주민 교육과정과 통합운영
11	부산	없음	지원계획 없음	예산미확보
12	대구	없음	지원계획 없음	예산미확보
13	성남	없음	지원계획 없음	예산미확보
14	제주	없음	지원계획 없음	예산미확보

※ 최초 신청한 18개 지자체중, 2002년에 서울 강북구가 사업을 중단하고, 2003년에 서울 강남구, 대전, 광주가 사업을 중단함. 예산미확보가 주된 중단사유임.

- 또한, 정보문화진흥원에서 수행했던 교육 내용과 지자체에서 직접 수행하고 있는 교육 내용을 비교해 보면 내용과 수준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음

<“S/W 기술교육” 교육 프로그램 현황>

분야	교육과정명	교육 내용
기반분야	컴퓨터실무과정	. 정보통신윤리 . 스프레드시트(엑셀) . 프리젠테이션 도구(파워포인트) . 액세스
	웹스타일리스트과정	. 웹 기획의 이해 . HTML/JAVA스크립트 . 웹사이트 제작(드림위버)
	서버구축과정	. Windows2000 . SQL 서버
	LINUX 서버구축과정	. 리눅스 운영체제의 원리 . 서버구축 . 서버를 이용한 웹 서비스 . 네트워크 보안 기술
프로그래밍 분야	비주얼 베이직과정	. Visual Basic
	ASP프로그래밍과정	. ASP
	JAVA프로그래밍과정	. JAVA
웹디자인 분야	웹디자인과정	. 정보통신 윤리 . 디자인의 이해 . 그래픽 제작(포토샵) . 포트폴리오 제작
	CAD 응용과정	. AutoCAD 2004
	캐릭터제작과정	. 캐릭터 제작의 이해 . 캐릭터 드로일(일러스트레이터) . 포트폴리오 제작
	웹애니메이션과정	. 웹애니메이션의 이해 . 웹애니메이션 제작(플래시) . 포트폴리오 제작
	웹영상제작과정	. 디지털 영상편집의 이해 . 디지털 비디오 편집(프리미어) . 포트폴리오 제작
총 12개 과정		

※ 집합교육은 교육기간 4주, 60시간 과정으로 운영

※ 출처: 정보통신부 국정감사 제출자료(2007.10.24)

<사례 1> 수원시 주민 대상 무료 정보화 교육 프로그램

<p>교육 일 : 매주 월~금요일 13:00~16:00 (1개월 과정)</p> <p>개강 일 : 2007. 6. 1. (금) 오후 1시</p> <p>교육내용 : 윈도우, 아래한글, 엑셀, 인터넷 활용능력</p> <p>참여대상 : 수원시 거주 20세 이상 누구나</p>
--

<사례2> 안산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정보화 무료 교육

과 정 명	프 로 그 램
WED 웹디자인	포토샵
VDO 웹영상제작	프리미어
WES 웹스타일리스트	드림위버
LIX 리눅스서버	리눅스
COP 컴퓨터실무	엑셀, 액세스, 파워포인트
CRT 캐릭터제작	일러스트레이터
ANI 웹애니메이션	플래시
VBA 비주얼베이직	비주얼베이직

※ 집합교육은 교육기간 4주, 60시간 과정으로 운영

※ 출처: 안산시청소년수련관 홈페이지(<http://www.ansanyouth.or.kr/business/education02.php>)

<사례3> 목포시 정보화 교육

교육기간 : 2007년 1월 ~ 12월

교육내용 : 포토샵, 컴퓨터기초, 한글, 인터넷활용

참여대상 : 전 시민(주부, 직장인, 청소년 등)

※ 출처: 목포시청 홈페이지(<http://www.mokpo.go.kr/>)

- 위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정보화 교육 사업은 주로 정보화 교육의 기초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음
- 정보문화진흥원의 “저소득층 청소년 정보화 교육”이 지자체로 이관됨에 따라 “저소득층 청소년 정보화 교육”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사업을 이관받아 “저소득층 청소년 정보화 교육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들이 지난 8년간 사업의 성과를 계승·발전시키기 보다는 오히려 사업의 취지를 무색케 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음
- 정보문화진흥원은 지자체 이관 후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고려하여, “저소득층 청소년 정보화 교육”사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8년간 축적한 성과를 계승·발전시킬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함

- ☞ “저소득층 청소년 정보화 교육”사업은 “정보격차 해소”를 목적으로 탄생한 정보문화진흥원의 설립취지에 부합하는 사업이나,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지자체와 협의하여 업무를 이관했음. 그러나 사업 이관 후 각 지자체별로 사업이 중단되거나 수준이 저하되는 등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음. 정보문화진흥원은 ‘정보복지’ 차원에서 전국 각 지역의 저소득층 청소년들이 정보화 교육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할 필요가 있음. 당장의 사업재개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예산이 부족한 지자체나 교육 프로그램이 부실한 지자체를 선정하여 집중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정보문화진흥원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람

- ☞ 아울러, 감수성이 예민한 저소득층 청소년들을 배려하기 위한 취지로 집합교육보다는 “정보화 교육 바우처(Voucher) 제도”를 도입하여 일정 한도 이내의 정보화 교육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사후 전액 또는 일부를 정보문화진흥원이 지원하는 방식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정보문화진흥원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람

최근 10년간 보급 중고PC 60%는 현재 사용 어렵다

□ 들 어 가 며

-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이하 : KADO)은 지난 1997년부터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 제16조에 의거, 따뜻한 디지털 세상을 위해 국내외 정보격차 해소를 종합적으로 담당하는 ‘정보격차 해소전담기관’으로
- ▲공평한 정보접근 환경조성 ▲디지털역량강화 및 기회확충 ▲U-Korea 및 디지털 한류 확산 ▲국가간 정보격차해소 종합지원 등이 주요 업무임.
- KADO는 지난 1997년부터 정보취약계층이라 할 수 있는 저소득층, 장애인들에게 정보접근 환경을 조성해 주기 위해 중고PC를 수집·정비하여 정보취약계층에게 무상 보급하는 『중고PC보급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음.

□ 문 제 점 & 질 의

- 사업이 시작된 이후 10년간(1997년 ~ 2006년) 중고PC는 약 15만대 수집되어 이 중 약 77%인 약 11만대가 보급 된 것으로 나타남.

< 표-1 > 중고PC보급사업 현황

연 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합 계
수집	1,085	2,291	3,125	6,743	8,059	13,060	23,189	22,158	33,188	40,012	152,910
보급	722	1,566	2,081	3,467	5,145	10,324	18,601	20,580	25,572	30,531	118,589
기증 대비 보급	66.5%	68.4%	66.6%	51.4%	63.8%	79.1%	80.2%	92.9%	77.1%	76.3%	77.6%

(자료출처 : 2007년 정보통신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 원장은 사업이 시작된 이후 현재까지, 보급된 중고PC 중 현재 ‘사용 중’일 것으로 판단 되는 PC가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위원이 확인 한 결과, 1997년부터 2005년 초반까지 보급된 PC는 현재의 인터넷 환경에서 사용이 불가능한(어려운) PC인 것으로 나타남.
- 즉, 보급된 PC의 60%(총 77,830대)가 현재 사용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KADO는 판단하고 있다는 것인 바, 이러한 판단이 내려진 이후 KADO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람.

〈 표-2 〉 중고PC보급사업으로 보급된 PC의 사용현황

연 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합 계
보 급	722	1,566	2,081	3,467	5,145	10,324	18,601	20,580	25,572	30,531	11,038	129,627
사 양	386이하			486이상 586이하			Pentium I 급		P-II급	P-III	P-III	-
사 용	사용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총 77,830대, 60%)									사용가능 (총 51,797대, 40%)		

(자료출처 : 2007년 정보통신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 본 위원은 중고 PC가 4년 이상 경과된 노후장비라, 보급한 PC로 인한 ‘효과’가 장기간 지속되기 어려운 점을 잘 알고 있음. 아울러 수혜자의 특성상 사용자 프로그램의 이용성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보급되고 난 이후 작게는 2년에서 3년까지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 그러나 보급 PC의 60%가 ‘현재’ 사용되고 있지 못할 것으로 추정되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그리고 앞으로도 쭉 보급한 PC는 2 ~ 3년이면 제 기능을 못하는 고물덩어리로 전락하게 되는 점을 감안 한다면 KADO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본 위원은 ‘보급’ 후 ‘사용’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중고PC를 보급 받은 이용자가 느끼는 ‘정보격차’는 중고PC를 보급 받지 않을 때와 비교해 더욱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 여겨짐.
- 아울러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사건으로 인해 온 국민이 PC에 있는 파일(정보)을 삭제해도 이를 감쪽같이 다시 복원할 수 있는 방법(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음.

- 이러다보니 KADO에 사용 안하는 PC를 기증하고 싶어도 정보유출의 우려 때문에 아예 CPU를 삭제하고 KADO에 기증하거나 기증을 망설이는 기업이나 단체, 개인이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임.
- 사실 < 표-1 > 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최근 10년간 기증된 PC는 약 15만대이지만 ‘보급된 PC’는 ‘기증된 PC 전체’가 아니라, 기증된 PC의 약 77.6%에 해당되는 약 11만대 인 것으로 나타남. 즉, 약 32.4%에 해당되는 약 4만여 대가 저사양, 장비불량, 핵심부품이 없음 등으로 인해 ‘보급’되지 못하고 ‘폐기’되는 운명을 맞게 되는 것임.
- 『중고PC보급사업』의 예산의 상당부분이 수집된 PC의 수리 등의 비용으로 충당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그리고 저소득층과 장애인 이용자의 고사양 PC에 대한 요구가 있는 만큼 중소PC보급사업을 사업 시작 10년이 되는 지금쯤 다시 점검해 봐야 될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에 대한 원장의 입장과 구체적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IT 수출입 동향 분석 사업” 의 복잡한 체계

- 사업예산은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에 책정되지만 실제 사업수행은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이 하는 PBS(Project-Based System) 방식
 -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의 IT 분야 수출입 정보와의 연계를 모색해야
- “IT 수출입 동향 분석 사업”은 2003년부터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이 관세무역연구원의 수출입 데이터를 받아 IT 품목의 수출입 동향을 분석하고 “IT 수출입 동향 보고서”를 발간하는 사업임
- 사업의 유래는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의 전신인 “ICA”, 즉 “한국정보통신수출진흥센터” 시기로 거슬러 올라가, 당시 예산과 인력이 매우 작았던 ICA에서 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확보하지 못하여 정보통신연구진흥원에 아웃소싱을 통하여 사업을 수행해 왔음
- 즉 사업예산은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에 편성돼 있으나, PBS방식의 관행에 따라 정보통신연구진흥원에 연구용역을 발주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2006년 예산 3억 5천만 원). 따라서 예산과 조직을 확대한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이 출범한 후에도 지속되고 있는 현재의 사업방식을 점검하고, 해외 IT 정보 및 수출입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으로서의 사업 이관이 타당성 여부를 검토함
- “PBS(Project-Based System)”, 즉 “과학기술 출연연구기관의 성과중심운영제도”는 연구비의 편성·배분·수주 등 연구관리를 정부나 민간기업이 의뢰한 프로젝트 중심으로 운영하는 제도로 연구소에 경쟁방식을 도입, 실적 우수 연구원이 더 큰 보상을 받고 연구책임자의 권한을 강화하는 제도임
- 그러나 인건비 확보를 위해 민간의 단기 과제를 수주하는 데 치중하다 보니 국가목표와 연계된 중장기 대형사업을 수행하기 힘들고, 연구원들의 인사평가에 연구 성과보다 재정기여도 즉 외부수탁과제 수주 실적을 반영하는 병폐도 끊이지 않는 문제점 등이 PBS 제도의 고질적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음
- 작년부턴 과학기술부를 중심으로 PBS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PBS의 비중을 점차 줄이고 기본 사업비를 50%까지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정보통신연구진흥원에서 수행하는 “IT 수출입 동향 분석사업”은 PBS 방식에 의해 추진되고 있으나, 사업의 구체적 내용 및 타 사업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할 때, 정보통신연구진흥원에서 계속 사업을 수행하는 것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최근 3년간 IT 통계조사 및 동향분석 사업 예산집행 내역 및 2008년 예산안>

(단위: 천원)

연도	연구 과제명	예산	집행실적	연구기간
2005	IT 통계조사 및 동향분석지원	220,000	175,477	'05.1월~'05.12월
2006	”	2,962,000	2,896,000	'06.1월~'06.12월
2007	”	6,420,000	4,540,601	'07.1월~'07.12월
2008	”	6,600,000	-	-

※ 정보통신부 국정감사 제출자료(2007.10.25)

- 정보통신부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동일한 사업에 대해 2006년의 경우 전년도에 비해 13배 이상 예산이 증액됐고 2007년에도 2배 이상이 증액됐음

☞ 정보통신연구진흥원장은 “IT 통계조사 및 동향분석지원 사업”의 최근 3년간 예산 변동이 극심한 사유를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2007년 집행실적이 저조한 사유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은 “2005년 동 사업의 자체수행을 위하여 관세무역연구원으로부터 수출입 데이터를 직접 받을 수 있는지를 검토한 바 있으나, 당시 관세무역연구원에서는 동 데이터는 개별기업의 수출입 내역이 담겨있어, 연구기관이 아닌 기관에게는 제공할 수 없으며, 더불어 관세무역연구원과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은 동 사업에 필요한 수출입데이터 정보공유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되어 타 기관에 제공이 불가함을 구두로 통보받았다고 밝히고 있음

- 또한 향후 계획도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은 동 사업과 관련하여 전문인력과 통계생성 및 분석 등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 본 원(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의 자체수행 보다는 정보통신연구진흥원과의 협력을 통하여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밝혔음

☞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장은 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방식에 아무런 이의가 없는가? 예산과 인력이 작고 사업을 수행할 전문인력이 없었던 “정보통신수출진흥센터(ICA)” 시기와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으로 승격된 지금이 사업수행 역량면에서 동일하다고 판단하고 있는가?

- ☞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수출입 통계자료를 제공하는 관세무역연구원과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이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개별기업의 수출입 내역이 담겨 있는 자료라 연구기관이 아닌 기관에 제공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장은 관세무역연구원의 주장에 동의하는가? 국내 IT 기업 수출입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것이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이고 사업 수행을 하다보면 국내기업의 수출입 내역 또한 당연히 파악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 ☞ “IT 수출입 동향분석 사업”은 ① 기관의 설립취지 및 타 사업과의 연관성 ② 현재 사업방식에서 발견되는 예산운용의 문제점 ③ PBS 방식의 사업 축소를 지향하는 정부 정책방향에 비춰볼 때, 현재 사업방식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정보통신연구진흥원장과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장은 각각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